

# 韓,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

### 뉴욕서 외교 공한 교환 통해... 정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후속조치 협의 예정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남미 미수교국은 시리아 1개국만 남았다.

쿠바는 1946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혁

명 이후 양국의 교류는 단절됐다. 이후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다만 쿠바에는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그간 문화·인적 교류와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 위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왔다. 양국 교역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 달러, 수입 7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 인식이 확산됐다. 현

지에서 K-드라마 열풍으로 한국어 배우 열풍이 불었고 약 1만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 'ArtCor'도 운영 중이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쿠바 영화제, 지난해 12월에는 아바나에서 한국영화 특별전이 각각 개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하는 등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평가돼 왔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양 국민간 우호 인식 확산이 이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對)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뉴시스



**'전북관광의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도, 시·군, 문화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등 20개 기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시·군·문화관광재단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은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 '준립 기반 약화' 지역방송 살리기 위한 방안은?

###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주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지원 공청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주관으로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역방송은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재정, 인력 등 준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금번 공청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 지원 조례안'과 지역방송발전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지역방송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및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권순재 전북자치도 보도지원팀장, 김은규 우석대학교 교수, 정원익 JTJ전주방송 기자,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박민 소장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라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지역방송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 과정의 공개성, △지원구조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공동체미디어와 연대, △지역사회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수진 의원의 주관으로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조례안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기준, 위원회 구성·운영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은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조례안의 위원 구성이 모호하고 행정의 개입 여지가 높아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지역 언론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지역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언론을 위한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추진 중인 조례가 지역언론의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해서는 안되고, 조례의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원구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급격히 미미해 환경변화와 재정 약화까지 더해져 지역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준립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민주당 혁신 징표는 인적 쇄신'

### 더새로포럼,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예비후보(전주병)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새로포럼'에서 민주당 혁신 공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새로포럼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의 인적 쇄

신에 대한 강한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 대표의 '새 순'과 '장강의 물결'은 당원과 국민의 기대권 타파와 혁신에 대한 요구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 위 발언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가장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는 정치

신인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판단기준은 언제나 개혁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였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혁신의 징표는 인적 쇄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새로포럼은 "당원과 유권자의 알 권리와 기득권의 조직권 타파를 위해 경선지역 후보 발표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 신당 첫발 내딛 조국 전 장관 오늘 전주 찾아 창당 경위 설명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제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첫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조 위원장은 16일 오전 전주를 방문,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조국신당 창당 경위와 신당 계획,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당에 참여하는 전북 인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주 완산도서관 부근 투구봉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무명장군의 넋과 의지를 기린다. 이후 초록바위밀-매곡교-남부시장-풍남문광장까지 역사의 길, 현실의 길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이날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오나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뉴시스



## 전북선관위, 총선 후보자 임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 20일부터 도내 지역 선거구 위원회별로 28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20일부터 임후보안내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각 선거구위원회별로 개최되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원선거(남원시제2선거구) 및 보궐선거(전주시제3선거구), 장수군의회원선거(장수군가선거구)의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완주군선관위를 시작으로 22일 익산시·장수군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군산시·남원시선관위, 26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28일 정읍시·김제시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각 선거구선관위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천원의 아침밥' 대상 도내 전 대학생들에게로

### 민주 이덕춘 예비후보 전북 연고 대기업 참여 등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



지만 재정부담에 한정된 지원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예비후보(전주을)는 15일 아침식사 결식을 이 높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이날 '청년정책 공약'과 관련해 "전주시의 20대와 30대 청년인구는 총 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서고 있지만 각종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전북지역 전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북지역 전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을 방학기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물가에 경제적 부담이 커진 대학생들이 단돈 1,000원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특별취재반

할 지원 대책을 다각화할 경우 전북지역 전 대학생에게 고품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지원 확대와 기초단체 차원의 교육청 참여, 전북 연고의 대기업 지원 등을 이끌어 내면 전북지역 전 대학생들의 아침밥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지역 대학생 중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희망하는 인원을 1,000명이라고 하고 이들이 150일을 이용할 경우 연간 15만명을 지원하게 된다"며 "1인당 3,000원씩 지원한다면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과 지자체, 전북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대학과 동창회, 대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경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대학과 동창회 등이 부담을 해왔지만 사회공헌을 위한 전북 연고의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면 재원 부담을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 해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선진국 기준 RE100, 자치도에 구축"

### 민주 최형재 예비후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 발표 전북 기후위기 사회연대 구성 도민 정책 참여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을)가 15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기후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 방지와 녹색 무역장벽 돌파를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기후정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기후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선봉에 서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기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공약으로 △선진국 기준의 RE100 체계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구축 △탄소세 도입과 탄소 배당금 배분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조기 운영 중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을 방해한 윤석열 정부 추궁 △탄소 중립형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과 전북 일원을 RE100 선도지역으로 만들고 RE100 에너지공사 창립 △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RE100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에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북 기후위기 사회연대'를 구성해 도민의 정책 참여와 이익 환원 보장 등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 국힘 공관위, 정운천 의원 등 전북 단수 후보 발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2차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중 전북지역 단수추천 후보자로 전주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정운천 의원(현 비례, 사진), 양정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

회장(전주갑),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익산갑), 문용희 전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익산을), 최용운 전 인천펜싱협회 부회장(정읍고창), 강병무 전 남원축산업협동조합장(남원임실순창) 등 총 6명이다.

전주를 단수공천이 확정된 정운천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